

# 野, 연일 미세먼지 기승에 文 책임론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영 사회수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 문 대통령, 김수현 정책실장.

수도권에 6일 연세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꺼내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사태 책임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돌렸다.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긴급 회동, 방중 의교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당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TF 구성도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안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노약자, 어린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는데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책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오히려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돼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저제야 겨우 긴급보고를 받았고 하나하나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게 전부였다. 네티즌들은 '문

세먼지'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큰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공약을 이행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에 공기청정장치 설치하라는 수준의 대책으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막무가내 발언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줄이는 게 미세먼지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 TF 구성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역습이 국가 재앙을 낳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고 미세먼지 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비상

황교안 "네티즌들 '문세먼지'라며 대통령 책임 따져"  
손학규 "일자리쫓 대신 미세먼지 대책위원장 맡아야"  
장병완 "재정 풀어 대응, 미봉책...탈원전 재검토해야"  
文대통령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 협의하라"  
이해찬 "4, 미세먼지 첫 인정...한중 공동대처 노력"

사태다. 국가 전체가 재난에 처했다. 국민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불편함을 지나서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정말 국가적인 비상대책을 만들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손 대표는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고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 문제, 국가 경제 문제 등을 생각해서 원전 폐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생명을 위협하는 게 현실인데 한국 정부는 중국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당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서 63건 가량 국회에 계류된 채 잠을 자고 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 심사를 앞 다퉈 다잡히고 있지만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을 두고 시각차가 커 법안 심사가 순탄치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미세먼지 소

관 상임위 중 한 곳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간사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병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부산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 공약에도 미세먼지의 대폭 저감이 포함돼 있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최근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또 재정을 풀어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비봉적인 대책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돈을 풀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인 석탄발전의 축소와 특히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의 재검토 및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며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 운영, 서해상 공동 인공강우 실시 등 대책 협의를 시사했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과 중국과 공동협력 사업을 위한 추가 경쟁에산한 편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겸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주는 미세먼지와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하다"며 "제주도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 곳이다"고 했다.

그는 "한중 환경부 장관이 지난 달 만나 협의를 했는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며 "아직 앞으로 어떻게 공동 대처하겠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다. 당도 환경부, 외교부와 얘기해서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MB, 349일만에 보석' 4대 조건 10억·집에만·접견제한·1주일보고

"보석은 무죄 석방 아냐...재구금 되는 일 없도록 주의하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현동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 (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 활동내역 보고 등이다.

서울고법 형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출석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석방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속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만기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회 재판부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중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 만기 4월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는 4월3일까지의 증인신문 일정을 빼곡하게 짰다. 하지만 이미 지정된 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는 이명박에게 출석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소환 방법의 하나로 서울고법 홈페이지

지에 증인 이름과 증인신문 기일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해 보석'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보석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전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 및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고령 및 건강 문제로 청구한 보석은 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나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형사소송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거도 금지되므로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고 자택에 구급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다.

## 임시정부 수립 4월11일 임시공휴일 지정 어려울 듯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야"

청와대는 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 아이들 돌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올해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무위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 일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가 (회의에서) 나왔었다"며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행정안전부,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협의가 돼야 할 문제였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뉴시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